

내달부터 제주전역 차고지증명제...

원도심지역 선결 과제 부지기수

부지 확보 한계... 단독주택 주차장 마련도 저조
공영주차장 신규 설치 난항 속 사유화 논란까지
도 “주차장 관제시설 설치 등 대책 마련에 최선”

내달부터 제주도 전역에 차고지증명제가 확대 시행되지만 주차장이 부족한 원도심 지역에 적용하기엔 부지 확보·인식 개선 등의 과제가 산적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지역 교통난 해소를 목적으로 지난 2007년 2월 제주시 동지역 대형차를 시작으로, 2017년 1월 중형차까지로 확대됐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제주도내 모든 지역에서 전기차를 포함한 중·대형 자동차의 신차를 구입하거나 이사를 할 경우 반드시 자기 차고지를 확보해야 한다. 단, 저소득층이 소유한 1t 이하의 화물차는 제외한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지난 10일 주간정책 조정회의에서 “차고지 마련하기 위해 도민들이 직접 발품을 파는 일이 없도록 예로사항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주차장 알선업’ 정도의 수준까지 정보를 안내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 불평 해소를 최우선으로 여

기고 재산권에 조심하는 마음으로 현실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코앞에 두고도 차고지 부지 확보와 공영주차장 확충 한계 등의 과제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 향후 주민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선 임대 차고지 확보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주차장 조리에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담긴 것은 1996년이다. 이전에는 주차장 확보 기준이 없어 실제 설치된 경우는 많지 않다. 상대적으로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 원도심의 경우 주차장이 없는 단독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의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자료를 통한 제주시 원도심 단독주택 주차장 확보율을 보면, 일도1동 7.4%, 일도2동 15%, 용담 1동 18.4%, 이도1동 20%, 건입동 20% 등에 그친다.

특히 원도심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해도 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데다, 기존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차고지 공급 대책도 사유화 논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대안이 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무료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전환할 경우 무인스마트 관제 시스템 설치 등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예상되면서 확보 방안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주도는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해 약 55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아파트와 학교, 교회, 근린생활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공유화 하는 사업은 참여를 위한 동의가 필요해 난항이 예상된다. 주민 동의는 물론, 사업 필요성을 이해하는 공감대 확보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체계 개편보다 더 큰 도민 갈등과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자료는 일부 누락된 정보가 있어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힘들다”며 “주차특계 예산 확보가 어렵다면 일반 회계, 주차전문업체 위탁 등을 통해서라도 주차장 관제 시설 설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민생활에 긴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소진기자



이희호 여사 빈소에 현화하는 이낙연 총리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서 현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동산경기 정점... ‘재정위기’ 오나

도의회, 정례회 중 2018 회계연도 결산 심사
2017년부터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 앞질러

2017년을 기점으로 세출예산 증가율이 세입 증가율을 앞지르기 시작해 제주도의 재정절벽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와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11일 제373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중 “2018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결산 심사”를 통해 침체 국면을 맞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입·세출 대책 등을 집중 주문했다. >>관련기사 2면

행자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읍)은 “2016년 부동산 경기가 정점을 찍은 뒤 2017년부터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을 앞지르기 시작해 최근 5년(2016-2019년) 평균 세입증가율은 7.8%이지만 세출증가율은 9.1%에 달한다”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짜임새 있는 세출전략이 필요하지만 2018년 한해 다 쓰지 못하는 예산(잉여금)이

8283억원에 달해 세입확충 노력과 함께 세출 효율성을 높여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2018년 비과세 감면액이 지방세 전체 징수액(1조4590억원)의 14.8%(2541억원)인 것은 지나친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에서 정한 기준(15%)은 위반되지 않지만 예산이 점점 불안해져 가는 상황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을 감면해주는 비과세 감면율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항국 의원(자유한국당, 제주시 용담1·2동)은 “2017년 기준 15% 정도였던 추경 규모의 증가율이 2018년에는 6.2% 정도로 감소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서도 “집행률이 87%에 불과해 아직도 13%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고, 현재 국고보조금 반납액도 200억원이 넘는다”고 추궁했다.

현길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재정절벽 위기가 보이지만 세수는 전년비 많이 감소하고, 내년에는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재정절벽이 온 지금은 재정자립도를 말할 때가 아니라 의존재원을 확보해서 필요한 예산에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은 “민간자본 이전 집행률이 70%도 되지 않고, 심지어 일부는 전액 미집행도 있다”며 “집행부에 농업 관련 예산을 요구하면 돈이 없다고 하지만 결산할 때 보면 많이 남는다”고 질타했다.

환도위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은 “제주도 16개의 특별회계 중 2018년 집행잔액을 보면 상수도사업은 5.91%, 하수도사업은 7.36%로 급격히 증가했다”며 “토지관리특별회계 44억원과 도시개발특별회계 138억원 등 특별회계에서 400억원에 가까운 잔액이 남고 있다. 특별회계와 기금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주차장 물양장 신설·개축 공사 ‘속도’

7월부터 용역 본격 착수

제주특별자치도는 7월부터 주차장 물양장 신설·개축하기 위한 개축공사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사 규모는 신설구간(L=186m)과 개축구간(L=96m)을 폭 15m로 확장하는 것으로, 내년 5월쯤 착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주차장은 물양장과 도로가 겹쳐져 어선 및 차량 통행에 따른 불

편과 이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영흥리 구간은 지난해 안전정밀진단결과 C등급을 얻어 개·수선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주차장을 이용하는 어민,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될 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신차·중고차 구입은 제주은행 자동차대출

우대금리 이벤트 진행중 (~8월 31일까지)
주요은행 대비 우대금리 0.5%p(연) 적용
신용등급: 1등급~4등급, 연소득: 2000만원 이상, 신용등급: 1등급~3등급

제주은행
문의: 1588-0079(7번)

지금은 차고지 증명시대

2019. 7. 1. 부터 차고지 증명제가 도 전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차고지증명제란?
- 자동차 구입·이전 등록, 주소 변경시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차량
- 중형·대형 자동차(저공해(전기)차 포함)
* 대형은 2007.2.1, 중형은 2017.1.1 전에 등록된 차량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
- 소형·경형 자동차는 2022. 1. 1일 부터 시행

차고지 인정 기준
- 사용본거지로부터 1km 이내 자기 소유의 주차장
* 자기 소유의 차고지가 없을 경우 타인 소유 차고지 1년 이상 임대하여 확보하면 인정

신청 및 구비서류
접수기관 | 교통행정과(Tel. 760-3297/3298) 및 읍면동주민센터
신청서류 | 차고지증명 신청서
* 타인 소유 차고지인 경우 차고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허가(동의)서
* 공동주택인 경우 사용허가(동의)서

지혜롭게 자기 차고지 갖기 사업 참여하기
담당과 대문 등을 헐고 차고지를 추가로 조성하는 경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자기 차고지 갖기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차고지증명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